# 공수처, 주중 尹 체포영장 집행 전망…정치권 기싸움

### 이재명 "집행 저항 막는 게 중요"
### 권영세 "무리한 행동 자제 필요"
### 최상목 "국가기관 간 충돌 안돼"
### 경찰, 경호처 현행범 분산 호송

최상목(오른쪽)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면담을 하기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이번 주중에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의 기싸움이 팽팽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것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사태를 막는 게 권한대행이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최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경제는 불안정이 가장 큰 적 아니냐"며 "정국이 안정되고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텐데, 법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회생을 위해서라도 국정 안정에 도움되는 것을 깊이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상황을 비판하며 조속한 영장 재집행을 촉구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헌정 파탄에 더한 민생 파탄의 위기다. 윤석열이 죽인 경제 회생을 국민의힘과 최 대행이 막고 있다"며 "윤석열과 국민의힘, 최 대행이 민생파탄의 삼두마차다.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의 법 집행을 주시하고 모든 경제 지표는 윤석열이 버틸수록 바닥"이라고 주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윤석열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계엄을 했다는 자신의 주장이 당당하다면 국격을 위해 법의 심판대에 스스로 올라야 한다"며 "수사기관에 당당히 출두해야 한다. 공수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는 당당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과 최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상사가 있어선 안된다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도 중재 노력을 해야 하지만 모든 관계기관이 무리한 행동을 자제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민의 안전이 중요하고 대한민국의 이미지, 달리 말해 국격을 좌우하는 문제인 만큼 적절한 조치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권 비대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도 시민이 다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경찰청과 대통령경호처에 "국가기관 간의 긴장이 고조돼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과 나라 안팎의 걱정과 불안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관계기관 간에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 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일 국가기관 간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방해하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분산 호송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수처는 국방부와 경호처 소속 부서장에게도 국군 장병과 경호처 직원들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책임도 질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런 가운데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적법하다며 윤 대통령이라고 해도 체포영장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 박찬대 "국힘, 윤석열·김민전 즉각 제명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수괴 윤석열과 '백골공주' 김민전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해 야 6당은 이른바 '백골단'(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마련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지난 10일 제출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던 내란 수괴 윤석열이 1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거짓말을 술 먹듯 하는 사기꾼이자 뻔뻔하고 난폭한 독재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이나, 독재자 이승만을 추앙하면서 이승만식 정치 깡패를 옹호하는 국민의힘이나 도긴개긴"이라며 "그렇지 않고서야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 앞에 우르르 몰려 나갈 이유가 없고, 독재·폭력의 상징 백골단을 국회로 끌어들인 김 의원 제명을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 민주 "최상목, 내란특검법 합의 요구 어처구니 없어"

### 두번째 특검법, 野 주도 법사위 통과
### 與, 명칭 등 문제 삼으며 표결 불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민의힘을 향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란 특검법' 수용을 거듭 압박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합의로 특검법 마련'을 주문한 데 대해서는 "시간끌기용 꼼수"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특검법을 제시하거나 야6당 특검법에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을 제시하면 협의하겠지만 마냥 기다리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는 입장을 냈는데 어처구니가 없다"며 "원내 6개 정당이 합의한 특검법을 1개 정당이 반대한다고 공포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의힘의 일당 독재를 용인하겠다는 뜻이다. 내란 진압을 방해하며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아라"고 말했다.

주철현 최고위원도 "최 대행이 보여준 일련의 처사는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법치 주의 실천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있다. 보통 공직자라면 당장 파면되고 처벌받을 사안"이라며 "최 대행에 거듭 경고한다. 내란 세력에 둘러싸여서 위헌 위법한 것을 중단할 생각이 없다면 사퇴하시고 수사와 처벌을 자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여야 대표를 찾아 "위헌적 요소가 없는 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내란 특검법' 합의 처리를 요청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 6당이 공동 발의한 두번째 내란 특검법은 이날 오전 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안 처리에 반대한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내란특검법 수사범위가 외환유치로 확대된 점, 특검법의 명칭 등을 문제 삼으며 반발했다.

송석준 의원은 "대한민국 안보를 담보하기 위한 정상적인 행위도 마치 외환죄처럼 문구가 들어갔다는 것은 이 법의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며 "2조 1항 11호를 보면 1~10호까지의 각종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에 넣도록 돼 있는데 과잉 수사의 여지가 있다"고 반대했다.

이에 대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특검법에 무슨 외환유치죄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 있냐"며 "(수사 대상을 보면) 비상계엄과 관련해 (북방한계선에서의)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이적죄에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 주철현 '헌정질서 파괴범죄 엄정 법 집행' 법안 발의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 갑·사진)은 13일 내란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의 수사나 체포·구속 영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발전소 주변 지역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발전소 주변 지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군형법 상 반란죄와 형법 상 내란죄 및 외환죄 등 헌정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 혐의를 수사하거나, 체포·구속 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발전소 주변 지역법 개정안은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우선 고용의 지리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우선 고용 혜택을 위한 지리적 범위를 발전소 5㎞ 이내 읍·면·동에서 주변 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 국정원 "트럼프, 대중국 압박 동참 요청할 것"

국가정보원은 13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기 행정부 출범시 대중국 압박 동참을 요구할 수 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핵동결과 군축 같은 '스몰딜(소규모 협상)'을 거론하면서 대한민국을 배제한 일방적 북핵 거래를 차단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 질의에서 국정원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두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2기 출범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총력을 기할 것"이라며 "그래서 대선에서 압승했고 공화당이 우위인 의회의 구조를 활용해서 트럼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성과 창출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행정부를) 충성파로 인선했으며 무엇보다 2개 전쟁 종식,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을 종식시키고 대외 개입은 최소화하면서 중국 견제, 전방위적인 대중국 압박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은 "그 과정에서 동맹국들에게 중국 압박에 동참하라는 요청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간 추진했던 한미, 바이든-윤석열 정부 사이에 확장억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장래가 불확실하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북미 관계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스스로 과거 북한과, 김정은과 정상회담 성사를 제1기의 대표적 성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과 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상반기 '방러'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서울=김선욱 기자

## 광주시의회, 제주항공 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

### "유족 경제·의료지원 포함돼야"

광주시의회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시의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희생자들이 속속 가족 품으로 돌아와 장례 절차가 끝나 이제 유가족과 피해 시민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지원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며 "유가족·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확실한 권리 보장, 심리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별법에는 유족 회복을 위한 경제·의료 지원과 심리치유 공간 마련, 지역 경제 지원이 포함돼야 한다"며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모든 피해자와 유가족이 충분히 지원받도록 정부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현 기자